

행 정 법

문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다.
- ③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사건을 행정사건으로 보고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 ④ 무과실책임이므로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문 2.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 ② 공공필요가 있어야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다.
- ③ 개인의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 ④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문 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다르다.
- ②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만을 인정하고 있다.
- ③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도 심판 대상이 된다.
- ④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재결을 하게 된다.

문 4.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항고소송
- ② 당사자소송
- ③ 단체소송
- ④ 기관소송

문 5. 지방자치단체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부산광역시
- ② 제주특별자치도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 ④ 경기도

문 6. 공무원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하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파면(罷免)
- ② 정직(停職)
- ③ 견책(譴責)
- ④ 강임(降任)

문 7. 강학상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甲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甲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② 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乙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 ③ 丙이 영업허가에 붙은 부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丙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④ 丁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丁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문 8.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을 징수하여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대표적인 행정벌이다.
- ②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다.
- ③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대법원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한 후에 행정형벌을 부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 9.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이나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당해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정지된다.

문 10.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임 행정기관의 권한이 수임 행정기관에게 대외적으로 이전된다.
- ②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③ 수임 행정기관은 현명주의(顯名主義)에 따라 위임 행정기관과의 위임 관계를 표시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④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위임 행정기관을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문 11. 다음 판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① 비례의 원칙
- ② 평등의 원칙
- ③ 신뢰보호의 원칙
-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문 12. 다음에서 설명하는 행정행위의 종류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① 허가
- ② 특허
- ③ 인가
- ④ 공증

문 13.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취소재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관의 종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건
- ② 기한
- ③ 부담
- ④ 철회권 유보

문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 ③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징수는 금전적 의무의 강제집행수단이다.
- ② 이행강제금은 비금전적 의무의 강제집행수단이다.
- ③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 ④ 직접강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강제집행수단이다.

문 16.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비용징수 → 대집행의 실행
- ②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계고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징수
- ③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계고 → 비용징수 → 대집행의 실행
- ④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징수

문 17. 다음 판례에서 ㉠, ㉡에 들어갈 행정행위의 효력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행정행위는 (㉠)과 (㉡)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 <u>㉠</u> | <u>㉡</u> |
|----------|----------|
| ① 공정력 | 불가변력 |
| ② 공정력 | 불가쟁력 |
| ③ 강제력 | 불가변력 |
| ④ 강제력 | 불가쟁력 |

문 18.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제정된 규범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②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제정권자를 기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구분된다.
- ④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이다.

문 19.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② 적어도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행정주체이어야 한다.
- ③ 공법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④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문 20.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수익적 처분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더라도 별도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